

야6당, '제3자 추천' 내란특검 재발의... '비토권' 제외

대법원장에 추천권...외환죄 추가
독소조항 수정, 與 반대 명분 차단
오는 14일 본회의 열고 처리 방침
국힘 "쌍특검법 수정안 논의 시작"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9일 여당이 제기한 독소조항을 수정한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면서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황윤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전종덕 진보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의안과에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야당 비토권'은 뺀 '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을 제출했다.

재발의되는 특검법은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한다.

대법원장이 특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2명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야당이 거부하거나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하는 이른바 '비토권'은 법안에 담지 않기로 했다.

야당이 그동안 지적해온 독소조항을 뺀 수정안으로, 반대 명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수사대상으로는 외환행위 등 외환범죄가 추가됐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사건' 등으로 남북 긴장을 고조시켜 비상계엄 선포를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야6당 의원들이 9일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황윤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공동취재

수사 기간과 수사 인력 등 내용도 기존 특검법서 수정됐다.

기존 특검은 최장 170일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김용민 원내수석은 "과건 검사나 파견 공무원 등 특검이 임명하는 수사관 인력을 155명으로 줄였다"며 "수사기간도 기

존 특검에 비해 20일 정도 줄여 70일 동안 수사하고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필요하다면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게 해 특검의 자체 판단 하에 10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미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어느 정

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기간을 줄이고 인력도 줄이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계엄 당시 투입된 군 부대의 시설 등 군사상 보안 시설의 압수수색을 허용한 특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나 언론브리핑은 하지 못하도록 내용이 수정됐다.

이날 재발의된 내란 특검은 그간 국민

의힘과 정부 측이 내란 특검의 '독소조항'으로 꼽아온 야당 단독 특검 추천 권한, '야당 비토권' 등 내용을 배제했기 때문에 여당이 내란 특검 추진에 동참할지 주목된다.

야6당은 이르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여당이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특검 협상과 관련해 "(여당이) 수정안을 가지고 오면 모르겠으나 다음주라면 시간끌기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라며 "국민의힘은 재의를 요구할 게 아니라 수정안을 가져오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속도전에 나선 야당과는 달리 서둘러 수정안을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아간다는 방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민주당이 표면적으로 밝히는 제3자 특검법이라고 하지만, 법안 내용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또 법치주의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 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국정협의회에 최상목·우원식·권영세·이재명 참여

여야는 9일 국정협의회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4인이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국정협의회' 대신 '국정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장실,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첫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진 의장은 "국정협의회에 참여하는 멤버는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우원식)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렇게 4인이 참여하는 것으로 했다"며 "실무협 의에서는 4자가 생각하는 관심 의제가 모두 논의됐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각 진영 내에서 내부 논의를 거쳐 다시 한 번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오늘) 어떤 의제들이 논의됐는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도 "양당 대표에게 보고해서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해 새로 만나서 해야 할 것 같다"며 "양당 대표에게 보고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각 의제별로 이견을 좁힐 수 있는 건 좁히고 합의 처리할 수 있는 건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12월31일 경제, 민생, 안보, 외교, 통상 등 민생 현안을 다루는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꾸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정준호, 국회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 합류

'제주항공 참사' 기간 내내 현장을 지켰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 갑·사진)이 9일 국회에서 구성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에 선정돼 진상규명에 나선다.

'국회 여객기참사특위'는 앞으로 여객기 참사의 원인 규명과 피해자·유가족 지원, 재발방지 대책 등을 논의한다.

활동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이 위원장(국민의힘)을,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간사를 맡았다.

국민의힘 7명, 민주당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5 명으로 구성됐다.

정 의원은 광주·전남 지역 유일한 국토교통위원으로 참여했다.

교통분야 전문성에

더해 참사 기간 내내 현장을 지키며 유가족들과 소통했다.

정 의원은 "역대 최악의 항공참사로서 결코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참사"라며 "객관적인 시각에서 철저한 원인 규명과 피해자 지원,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이재명, 박정훈 무죄에 "기소행위 엄정 조사·처벌해야"

1심 무죄 선고... "채 해병 진실 규명" 박 대령 "억울함 없도록 혼신의 노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채해병의 죽음에 얽힌 내막과 외압의 몸통을 밝혀내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정권은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항명했다. 사법 정의를 조롱하고 군에 대한 신뢰를 바닥까지 추락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감추려 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결국 승리한다"며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진실이 은폐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전국 정당추진특위 일정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박 대령 사건은 기소할 수 없는 사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9일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스

를 기소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것"이라며 "기소 행위에 대해 엄

정하게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전 단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단장은 채해병 사건을 수사 후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 지시를 어겼다고 재판부에 넘겨졌으나, 재판부는 박 전 단장이 '명령'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단장은 상관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 전 단장은 선고공판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성원이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며 "지혜롭고 용기 있는 판단을 내려준 군판사들에게 경의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는 "채상병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할 것"이라며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당정, 16일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점검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응급의료체계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다음

주 16일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점검 및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호흡기 전염병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과 당정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지난 8일부터 이를 연속으로

'비상 경제안정 고위 당정 협의회'와 '설성수품 가격안정 및 소비 진작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고 민생 대책을 내놓는 중이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윤희숙 전 의원이 맡았다.

서울=김선욱 기자